

체불방지·노후소득 극대화 목표 금융상품 이해도·재정지원 관건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 도입 목표
상품유형에 따라 직접 운용방식 지정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투자도 가능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임금 체불 가능성을 낮추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 정부, 퇴직연금 도입 대상 확대 방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는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어 2028년에는 5~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 기간에 비례해 목돈으로 지급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체불의 위험이 적고 기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장점이 많은 만큼,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적 과도기 동안 재정을 지원해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당시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체불액의 40%는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제도 숙지해야 유리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가입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많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유사하게 일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해지 사유 없이는 세금이 발생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한 직장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유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 측에서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선택해 운용 후 약정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 측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

운용 상품은 예금·채권 등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보장형 상품'과 증권·펀드 등 기대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적립된 금액을 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며, 투자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디폴트옵션(운용방식사전지정제도)'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등 퇴직연금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진다. 옮겨진 금액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이나 추가 투자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은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 질병, 파산 등 사유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에서 최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금융권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해 적립액 대부분이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재투자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 불성립

기업에 미칠 중대한 재무적 충격 고려
이용자 피해 보상 법정다툼 가능성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 이용자 보상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조위에서 지난달 결정한 조정안에 대해 기한 내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앞서 통신분조위는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의 절반 보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

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지난 7월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 기한을 설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문의 문자 한 차례 발송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기업에 미칠 중대한 재무적 충격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으로 번질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통신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보안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영업 중단 보전 비용 25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측은 올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데이터 50GB 무상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 자체 보상안을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0@

대출 이동 활성화 등 年 2730억 부담 완화

》1면 '성실상환 소상공인...'서 계속

◆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3종 세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통해 대출 이동 활성화 및 금리인하 요구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도입된 가게대출 갈아타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우선 추진된다. 또한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 상품 경쟁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소상공인 차주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며,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다.

은행권에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 개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편 방안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 은행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조속한 폐업 이후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폐업지원대환대출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일시상환 요구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현장제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현장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2분기 가계 저축률 8.8%… 6년來 최고

금리 하락에도 저축률 상승 추세 “미래 불안으로 ‘보복 저축’ 증가”

2분기(4~6월) 가계 저축률이 8.8%로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산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반등한 것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여파로 가계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 S)에 따르면 2분기 총 저축액은 239조 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3월) 저축액보다 8조 7254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약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저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청년층의 취업불안, 결혼 출산 집마련 등 당장 큰 소비보다 우

선 저축을 우선한 영향이다.

현재 20~3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평균 71.2%로 10명중 7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61.3%, 30대는 81%다. 1년전 20대의 경우 61.3%, 30대 80.5%인 것과 비교하면 30대의 비중만 늘었다. 고용됐던 20대가 30대까지 일을 이어간 반면 20대는 일을 하지 않아 되레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보복저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복저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명품, 외식에 지갑을 열던 '보복 소비'의 반대 개념으로, 생활필수품 이외에는 거의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자, 주택구입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도 기대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23년 기준 83.5세로 길어짐에 따라

노후목적의 저축비중도 늘었다. 60세 이상이 근무하는 비중은 2019년 7월 47.1%에서 47.8%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저축률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내수(소비, 투자)회복이 더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공한 민생지원금이 소비를 늘려 보복저축이나 노후목적의 저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불확실성과 미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 정책금융마저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보복 저축 확산이 예상되는 요인"이라며 "경제성장을 추경에 의지하기 보다 금융불확실성을 낮추고 청년채용, 청년연장을 도입해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5@

“첨단 기술·현지 생산력 바탕 북미 입지 강화”

》1면 ‘SK온 북미 재생...'서 계속

또 열 확산 방지 솔루션과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계약은 SK온이 지난해 말 ESS 사업실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한 뒤 거둔 첫 성과다.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통해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를 상쇄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

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나단 푸어 플랫폼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북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wkh@